"저축銀 피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

국조특위, 당초 2억서 후퇴…이르면 9월 지급

정부 반발·포퓰리즘 입법 비판 여론 의식한듯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5천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2억원 전액 보상' 방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 입법'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에 의견을 보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60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되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예금자가 냈던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현재 국제금융 시장의 혼란을 거론, "이렇게 휘둘리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예금과 투자액은 전액 보상,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빠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금융질서를 해치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예금보험 보장한도를 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한 사실상의 전액보상은 금융시장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순위채권을 보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이 아닌 채권을 보상하는 것은 자기투자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국조특위도 저축은행의 법인세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한 뒤 피해를 보상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지명직 최고 호남·충청 한 명씩 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9일 홍준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호남 배제론' 논란과 관련, 관례대로 호남과 충청에 각각 한 명씩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이라며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당내 '물갈이' 논란에 대해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납득할 만한 공천기준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것도 없이…"라면서 "공천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공당에서 공천은 국민이 납득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 "그간 구상한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조만간 활동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민정수석 현직이냐 전직이냐

MB, 노환균 고검장·황희철 차관 등 후보군 놓고 고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마친 후보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고민은 현직 검찰 출신의 기용 여부다.

일단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임기 후반기에 검찰 조직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직의 검찰 간부가 민정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할 경우, 야권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검찰 조직을 장악,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제출한 후보군 가운데 현직은 노환균 대구고검장(14기, 경북),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13기, 경북), 황희철 법무부 차관(13기 광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광주 출신의 황희철 차관이 전격적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중에서는 최근 사직한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13기, 부산), 황교안(13기, 서울) 전 부산고검장과 로펌 소속인 김회선(10기, 경북) 변호사, 정진영(13기, 대구)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공직은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민정수석 후임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 5당 정책연대 출발부터 '삐걱'

한진重 사태 등 현안 논의 첫 협의회 민주·창조당 불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이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9일 열린 첫 정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창조한국당은 정책 책임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각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오기로 했다는데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실무적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저지 방안 등을 향후 논의 과제로 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당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야 3당만으로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책연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근간은 자리 배분이 아니라 정책공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는 "야 5당은 이미 6·2 지방선거나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사항을 만들어 왔다"며 "야 5당의 정책협의의 내용과 구체적 실행이 내년 총선 연대의 내용과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재진 법무·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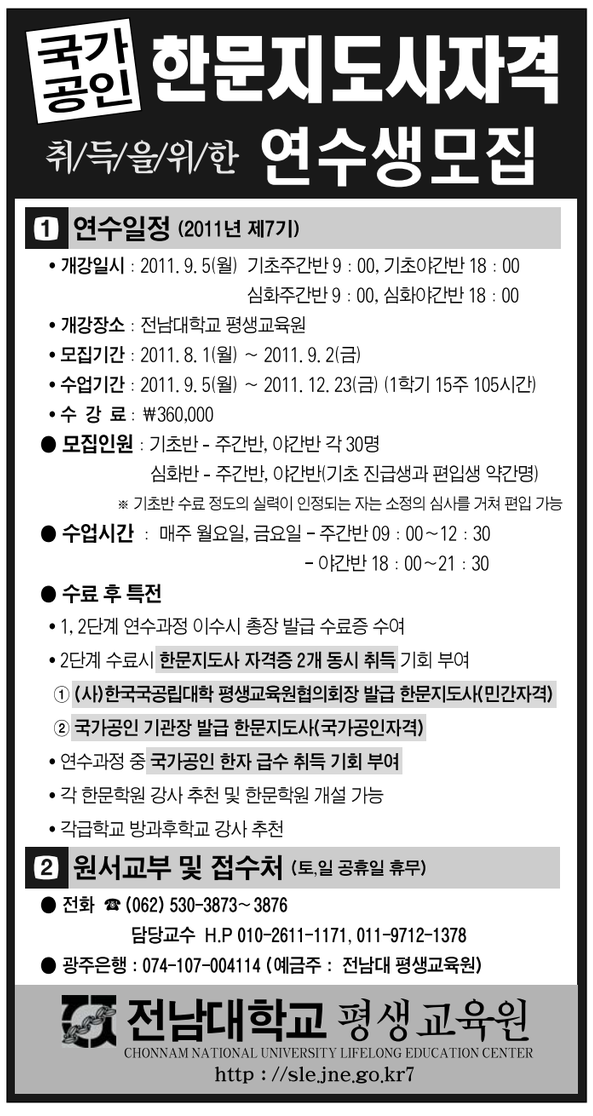
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보이콧' 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두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무수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두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